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원평가제도 악화, 교육과정 개혁, 법외노조 탄압 ...

박근혜 정부의 8~9월 공세에 맞선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그전부터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자본가들에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했고, 새누리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주로 한 1차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한(6월 17일) 데 이어 일반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주로 한 2차 방안을 발표할(8-9월) 예정이다.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박근혜) 한 마디로 "임금은 낮게,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하는 정책들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을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노동 개혁"에 필사적이고 조급하게 달려드는 이유는 경제 위기 때문

이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외생 변수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경제는 이런 세계경제 위기에 극히 취약하다.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쳐 '성장 쇼크'가 현실화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 방안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같은 노동자 고통전가 프로젝트다.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공격해 기업의 수익성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고통전가 최전선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청년과 장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 개혁이 청년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 실업 문제는 정규직이 과보호된 탓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고용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규정

한 청년고용촉진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의 1%만 사용해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진짜 목적은 노동계급 내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몫을 줄이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고 그에 맞춰 일을 더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아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교원 평가 강화 등 같은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장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으로 인한 소득 공백기를 우려하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심정을 야비하게 이용해, "보수총액의 변동 없는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임금피크제)을 도입하

려 한다.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고는 그에 맞춰 일을 더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으라는 것이다. 아니면, 정년 후 임금을 최대한 50% 깎아 재고용하는 것도 검토하는 듯하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정책 협의 기구'에서는 보수 체계만 논의하지, 보수 인상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공무원연금 삭감의 대안이 아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복지비를 줄이려고 더 싼 보수에 더 오래 일 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장년 탓으로 돌리는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 대책도 결코 아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교육 예산을 늘리고 정규 교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교원 명퇴를 확대해 신규 교사 임용을 늘리고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다(7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 교원 명퇴 확대를 통한 신규 교사 채용은 고용 착시 효과를 내기 위한 알파한 수법이고, 시간제 공무원은 질 나쁜 비정규직일 뿐이다.

▶ 뒷면으로 이어짐

▶ 뒷면으로 이어짐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교원 정원도 축소하려 한다. 정규직 교사들의 저항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하는 식으로 교원 정원을 축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이다. 전교조는 이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라

지난 7월 1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골자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연계·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직 사회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방향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다. 그 목적은 노동자 간 경쟁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전체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상여급평가가 승진점수에도 반영되고 보수도 결정하게 되면 교사들의 경쟁과 관리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시된 평가 기준을 보면 주당 수업시수, 수업 공개 횟수, 수업 컨설팅 횟수, 상담 실적, 생활지도 곤란도, 학년 곤란도 등 교사들의 업무를 계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향후 교원의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승진(인사)이나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능력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원평가다.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령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또한 장기능력향상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제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국가의 입맛대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 교육제도의 실패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교원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정 개악

지배계급에게 ‘바람직한 노동력의 태도’를 가르쳐라

박근혜 정부는 진작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 애썼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국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뿐 아니라, 사회교과에서는 ‘기업가의 생애 교육’을 포함하는 등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시각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산업(기업주)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선취업 후 진학과 일·학습 병행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문·이과 통합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기업주에 얼마나



유용한 노동력으로 생산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등 대놓고 지배계급에 바람직한 노동력의 태도를 가르치겠다는 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 정부답게 개정 교육과정의 9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 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3개월 만에 개발된 교과서로 교육을 해야 할 판이다.

법외노조 저지 투쟁의 의미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전임 정부들도 전교조를 탄압했지만, 박근혜는 각별히 전교조를 증오한다. 박근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는 데 만족하기보다 아예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자, 검찰은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한 16대 지도부와 조합원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4.24 연가투쟁을 이유로 지도부와 조합원 등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는 데서 행정부와 한통속이다.

자본주의에서 교육 제도가 하는 구실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핵심 장치의 하나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노동이 지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 지배자들은 학교 교육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교사 통제를 사활적으로 여긴다.

새정치연합이 악법인 교원노조법 폐지는 고사하고 교원노조법 2조 개정조차 미온적인 것도, 그들이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국회(사실상 새정치연합)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먼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촉진하려 해야지 국회 대응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거추장스러운 민주주의즘(노동기본권)은 간단히 내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들이댄 똑같은 근거, 즉 노동조합 규약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와 이주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투쟁은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도 이런 전교조 투쟁의 의의를 지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지지하는 고무적인 소식들이 많다. 세종충남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분부를 중심으로 전교조 지키기 1백만 서명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세종충남 공무원 노동자들 3천여 명이 서명했고, 현대제철 노동자들도 구내 식당에서 서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도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8~9월 국면에 대응할 투쟁 방침 필요

법외노조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 공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법외노조 탄압은 전교조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이런 공격에 맞선 저항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재편모임)의 합법주의 노선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편모임은 전교조를 해체해 시도별로 노조 설립 신고를 다시 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노조의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지키려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성은 교육을 바꾸고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위한 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총투표에서 조합원 70%가 법외노조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투쟁하는 전교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기쁘게도, 투쟁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국면에서 조합원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법외노조 저지 투쟁에 “긴장”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 공격뿐 아니라 새로운 공격들 — 노동시장 구조 개악, 교원평가와 성과급 악화, 교육과정 개악 등 — 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도 8~9월에 밀어붙이겠다고 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들을 묶어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가 2심 판결 직후 조합원 연가 투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데 그전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9월 11일 1차 파업, 10월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도 8~9월 박근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연가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민주노총에도 9월 경으로 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